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김 정 만\*

- I. 6자 회담과 대북 경제제재
- II. 대북 경제제재의 변천과정
- III. 대북 경제제재 내용
- IV. 향후 전망: 경제제재의 완화 가능성

### 요약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007년 2. 13 합의 이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한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 개시 예정
  - 향후 북미간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전망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에서 시작
  - 이후 '88년 테러국 지정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이후 제재가 완화되다가 2002년 북핵 위기 발생후 다시 강화되었음
- 대북 경제제재를 원인별로 보면, ①공산국가와 같은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 ②테러국가 지정에 따른 제재, ③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제재로 구분됨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포괄적 경제봉쇄조치로서, 분야별로 보면, ① 북한상품의 수입제한, ② 미국상품의 대북 수출통제, ③ 대북 민간투자의 제한, ④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한, ⑥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지원 제한, ⑦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관련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입금지 등으로 구분됨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조사팀 부부장

-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북·미간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는 대부분 대통령령 또는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문제는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제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금지는 지속될 수 있음

## I. 6자 회담과 대북 경제제재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07년 2. 13 합의 이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한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 개시 예정
  -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의 단계별 핵 폐기에 상응하여, 미국 등 5개국이 북한에 에너지 지원과 관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임
  - 합의문 2조 3항에서 북한과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 세부사항은 실무 워킹그룹인 '미·북 관계 정상화' 그룹에서 논의
- 향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현안으로 대두 예상
  -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노력에 상응하여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 전망
  -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대규모 에너지 지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대북 적성국 교역법의 종료,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비롯한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II. 대북 경제제재의 변천과정

### 1. 대북 경제제재의 발단과 원인

#### □ 대북 경제제재의 발단

- 미국의 대북한 포괄적 경제봉쇄(comprehensive embargo)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12월 17일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의 적용에서 비롯됨
- 이후, 1988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테러국' 지정, 인권문제 등과 같은 제재목표가 추가되어 대북 제재가 강화되었음
- '90년대 들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섬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해 전략물자에 대한 대북 수출통제가 강화

#### □ 대북 경제제재의 원인

- 미국의 대북 제재를 원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 ① 공산국가와 같은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 ② 테러국가 지정에 따른 제재, ③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제재 등임

### 2.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

#### □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2000년까지 대북 경제제재가 일부 완화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89년, '95년, 2000년에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제재 완화는 '94년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 및 이에 따른 북·미 기본합의문 작성 이후 이루어졌음 (표1 참조)
- 교역 및 투자, 인적교류와 관련하여 일부 완화

#### □ 교역·투자·금융 부문의 핵심 조치들은 제외

- 테러지원국 지정, 적성국 교역법 적용의 유지로 교역·투자 완화와 관련된 핵심조치들은 제외

- 북한산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적용 배제,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품(반도체, 컴퓨터, 제어계측 기계 등)의 수출 금지
- 대북 원조, 미국 및 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금융 제공 금지
-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금융기관법에 의해 제재

〈표 1〉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 1989 - 2000년

시 기	내 용	비 고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 학술, 문화 등 비상업 분야에서의 미국 여행사에 의한 개인 또는 단체여행 주선 허용</li> <li>○ 출판물의 수출입과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허용</li> <li>○ 식량,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 인도적 물품의 대북한 수출을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자산통제규정 및 수출관리법 일부 개정</li> <li>• '88년 한국의 '7·7 선언'에 따라 상징적 차원에서 허용</li> </ul>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한 직통전화 허용</li> <li>○ 미국인의 개인적인 여행 및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의 허용</li> <li>○ 언론사의 지국 설치 허용</li> <li>○ 북한이 제3국과 거래시 미국은행 이용 허용</li> <li>○ 마그네사이트 직교역 허용</li> <li>○ 연락사무소 개설·운영과 관련한 자본거래 허용</li> <li>○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거래의 허용</li> </ul>	북·미 기본합의서에 근거 (Agreed Framework)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연합 및 국제적십자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li> <li>○ 미국인이 제3국에서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li> </ul>	해외자산통제 규정 일부 개정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산 소비재 및 금융서비스의 대북 수출 및 제3국 경유 재수출 허용</li> <li>○ 미국산 소비재 및 금융서비스의 대북 수출</li> <li>○ 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수송, 도로건설, 관광산업분야에서 미국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 허용</li> <li>○ 미국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한 대북 일반화물 운송 및 승객 운항 허용</li> <li>○ 미국 거주 민간인의 북한 친지 및 개인에게 송금 허용</li> </ul>	상무성의 수출관리국(BXA), 교통성, 재무성의 해외자산관리국(OFAC) 명의로 2000년 6월 19일 연방관보에 게재

### 3. 대북 경제제재의 재 강화와 6자회담

#### □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

- '06년 북한의 미사일발사,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가 재 강화(표2 참조)

- 핵실험 이후에는 기존의 이국간 제재에서 UN차원의 다자적 제재로 확대

□ '05년 9월, '07년 2월의 6자회담 합의로 경제제재 완화기대

- '미·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적성국 교역법 종료를 위한 협의결과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결정

〈표 2〉 대북 경제제재의 재 강화 조치: 2005 - 2007년

시 기	내 용	비 고
'05.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카오 소재 Banco Delta Asia를 북한의 불법거래(돈세탁, 위조 달러 유통 등) 지원 혐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직·간접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li> </ul> </li> <li>○ 이 결과, Banco Delta Asia에서는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마카오 당국은 동 은행에 긴급 신용을 공여</li> </ul>	미국 애국법 (USA Patriot Act) 제311조에 근거
'06.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후,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강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리 결의안은 UN 회원국들이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와 이와 관련된 물질·상품·기술, 사치품의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를 요구.</li> <li>- 또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을 요구</li> </ul> </li> </ul>	안보리 결의안 1718호 ('06. 10월)에 근거
'07.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북한에 수출되는 상품 중 식량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과 재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li> </ul>	수출관리규정 일부 개정

### Ⅲ. 대북 경제제재 내용

#### 1. 개요

-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포괄적 경제봉쇄조치로서,

- 구체적으로는,

- ① 북한상품의 수입제한, ② 미국상품의 대북 수출통제, ③ 대북 민간투자의 제한, ④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한, ⑥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지원 제한, ⑦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관련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입금지 등으로 구분

## 2. 분야별 대북 경제제재 현황

### 가. 북한상품의 수입제한

- 관련근거 : 적성국 교역법 및 해외자산통제규정, 통상법, 무역협정연장법

#### <제한 내용>

-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반입에 대한 규제는 i) 포괄적 경제봉쇄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수입의 제한조치, ii)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 MFN) 대우의 적용 배제, iii)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의 적용배제에 의해 이루어짐
- 해외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 OFAC)은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적성국 교역법의 시행령인 해외자산 통제규정을 적용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건별로 사전 승인하여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
- 북한산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와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수입을 불허
  - WTO 회원국에게는 정상교역국으로 관세율표의 Column 1을 적용하되, 북한과 같은 적성국가에 대해서는 Column 2를 적용(첨부 참조)
  - ※ OFAC는 대북한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도 북한 내 거주자에 대한 생활비, 북한여행과 관련된 최소비용, 정보수집을 위한 자료의 반입과 관련된 비용지불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 나. 미국상품의 대북 수출통제

- 관련근거 : 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적성국교역법 및 해외자산통제규정, 핵무기확산 금지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등

<제한 내용>

- 테러지원국, 적성국, 인권침해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대한 수출을 포괄적으로 통제
  - 상무부 산하의 수출관리국(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은 수출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별적으로 대북한 수출을 허용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식량을 포함한 민간의 기초생활품 및 인도적 차원의 상품에 국한하여 허용되며, 일정규모 이상은 통제

#### 다. 대북 민간투자의 제한

- 관련근거 : 적성국 교역법 및 해외자산통제규정, 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등

<제한 내용>

- 해외자산통제규제에서 적성국가인 북한에 대한 투자나 금융거래를 금지
  - 다만, 2000년 제재 완화로 광업, 석유 등 인프라와 관광분야 등 일부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가능
- 수출관리법 및 규정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금지
  - 대북 투자를 위한 설비투자가 제한
- 적성국인 북한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의 불이익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또는 내국세법의 개정이 필요

#### 라.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

- 관련근거 : 적성국교역법 및 해외자산통제규정

<제한 내용>

-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관련규정 및 행정명령에 따라 적성국가인 북한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

## 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한

- 관련근거 :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적성국교역법

### <제한 내용>

- 적성국가인 북한에 대한 미국수출입은행의 여신제공 금지, 테러지원국이며 인권침해국가인 북한에 대한 정부차원의 원조제공 금지
  - 수출입은행법에 의거, 대북 거래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제공 금지
  - 미국의 대외지원을 관장하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대외지원법에 따라 테러지원국이며 인권침해국가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금지
    -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지원가능

## 바.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금융지원 제한

- 관련근거 : 국제금융기관법

### <제한 내용>

- 국제금융기구가 인권침해국가나 테러국가에 대한 금융을 제공할 경우,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집행이사들은 대출이나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의 연장에 의무적으로 반대해야 함

## 사.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관련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입금지

- 관련근거 : 수출관리법 및 수출관리규정(EAR), 무기수출통제법, 핵무기확산 금지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등

### <제한 내용>

- 핵, 미사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용 품목(이중용도품목 : Dual Use Items)의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
-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르면, 원산지가 미국인 품목이거나 수출품목(상품, 기술, 소프트웨어 포함)의 최종 가격 대비 미국 품목의 가치가 10% 이상인 경우, 수출 당사자 및 수출과 관련된 운송업자까지 제재



- 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0년 이하의 수출권 박탈 또는 대미 수출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짐
- 수출관리규정은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재이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기업에게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표 3〉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현황

적용법규	내용	비고
적성국 교역법 (Trade with the Enemy Act: 1950)	재무부 승인없이 적성국과의 교역 금지	북한을 적성국가로 지정
해외자산통제규정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1950)	적성국 교역법에 의거,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및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	"
수출통제법 (Export Control Act: 1950)	대북한 수출 전면 금지	상무부 정책 사항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1975)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 수출시 허가가 필요	KAL기 폭파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산 군수품을 테러지원국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출, 재수출, 인가, 여타 방법에서의 제공 금지</li> <li>• 테러지원국의 미 군수품 획득 관련 신용거래, 지급보증, 여타 재정지원 제공행위 금지</li> </ul>	북한의 대이란, 시리아 미사일 기술 확산에 대한 제재
국제무기거래규정 (Int'l Traffic in Arms Regulation: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테러 지원국가와의 방산물자 및 관련 용역 판매 및 수출입 금지</li> </ul>	테러지원국에 적용
통상법 (Trade Act: 1975)	최혜국 대상에서 제외	대북한 일반특혜관세 제외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1962)	인권침해국가, 공산국가,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지원 및 원조금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금지
국제금융기관법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8)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집행이사들은 인권침해국가나 국제테러법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이나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의 연장에 반대해야 함	KAL기 폭파사건 후,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 후 적용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Bank Act: 1986)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북한 수출금융 제공 금지	공산주의 국가에 일괄 적용

자료: 양운철(2001) p.15,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미국 의회조사보고서, 2006, 노틸러스 연구소 (www.nautilus.org) 참조

주: ( )의 연도는 북한에 대한 법규 적용시기임

- EAR은 전략물자에 관한 국제수출통제체제와 함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고 있음

## IV. 향후 전망 : 경제제재의 완화 가능성

### □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북·미간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점진적 경제제재 완화 예상

- 북한 핵시설의 폐쇄 이후 핵 불능화(disabling)를 위한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현행 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통한 제재 완화 전망
- 현행 교역관련 통제체제를 유지하면서, WMD(대량살상무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품목을 제외한 소비재 관련 품목의 수출입 허용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완화 관련 교역·통상 확대 방안 협의 진행 전망
- 고농축 우라늄, 기존 핵무기 등을 포함한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핵시설의 해체(dismantling)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대북 제재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하여 경제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임
- 적성국 교역법 적용의 종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북한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및 특혜관세 부과, 대북 지원 및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의 여신제공 허용과 같은 본격적 제재 완화 조치가 가능

### □ 경제제재 완화 절차

- 대부분의 교역 및 투자의 제한 조치는 대통령령 또는 행정명령으로 해제 가능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의회와의 협의 필요
-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위해서는
  - “해당국가의 지도부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미국 대통령이 상기 사항들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거나,
  - “최근 6개월간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향후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경우로 미국 대통령이 상기 사항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해제 조치 발효 45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함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제하는 전략물자와 이중용도품목의 수출금지는 지속될 수 있음. 이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 회복이 필요.

#### 〈참고문헌〉

- 양운철,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원인, 과정, 전망』, 세종정책연구 2001-7, 성남: 세종연구소, 2001  
김규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조동호, 김상기,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의 경제적 효과』, KDI 정책포럼 149호, 1999  
Dianne E. Rennack, North Korea: Economoc Sanctions, CRS Report for the Congress, 2006

〈첨부〉

주요 품목별 정상국가와 적성국가에 대한 관세율 비교

업종	HTS 코드	품목	관세율	
			정상교역국 (Column 1)	적성국가 (Column 2)
의류 및 섬유류	420310	혁제 의류	4.7/6*	35
	610620	인조섬유제 여자용 블라우스 셔츠	14.9/32	54.5/72
	610910	면제 T 셔츠	16.5	90
	610990	방직용섬유제 T셔츠, 싱글니트 등	2.6~32**	55.5/90
	611030	인조섬유제 저지, 폴오버, 가디건 등	6~32	35~90
	611592	면제 스타킹, 양말	0~13.5	40/51/90
	620193	인조섬유제 남자용 아노락, 스키자켓	4.4~27.7	58.5~90
	621510	넥타이	7.2	65
	620530	인조섬유제 남자용 셔츠	12.2~25.9	45~76
	650590	기타 모자	1.1~7.1	35~65
신발	640299	기타 신발	3~48	35~84
	640399	기타 신발	5~10	20
	640411	스포츠화	10.5~48	35~84
	640699	신발 부분품	0 / 5.3 / 14.9	15~80
가방	420212	트렁크, 슈트케이스	5.7~20	40 / 65
	420222	핸드백	5.7~17.6	40~90
완구	950390	기타 완구	0	70
	950341	속이 채워진 완구	0	70
고무	401110	승용차용 공기타이어	3.4 / 4	10
	401120	버스, 화물차용 공기타이어	3.4 / 4	10
플라스틱	392690	플라스틱제 제품	0~6.5	25~80
	392310	플라스틱제 상자 케이스	3	80
	391810	염화비닐제 바닥 깔재, 벽피복재 등	4.2~6.5	25~84.5
기타 경공업품	732393	스테인레스제 식탁, 부엌용품	2	40
	761519	알루미늄제 식탁, 부엌용품	3.1	45.5
	821599	기타 부엌, 식탁 용품	0~15.8	40~65
	960810	볼펜	5.4	40
	392610	플라스틱제 사무용품, 학용품	5.3	80
	900319	안경테	0	50
신변 장신구	711319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	5~7	80
	711719	비금속제 모조신변장식용품	0~11	45/80/110

업종	HTS 코드	품목	관세율	
			정상교역국 (Column 1)	적성국가 (Column 2)
자 동 차 부 품	870899	자동차 부품	0~2.5	0~25
	870829	자동차 차체 부품	2.5	25
컴 퓨 터 부 품	847330	컴퓨터 부품	0	35
	847160	컴퓨터 입출력 장치	0	35
	847170	컴퓨터 기억장치	0	35
전 기 및 전 제 자 품	841510	에어컨	0~2.2	35
	841810	냉장, 냉동고	0	35
	845011	세탁기	1.4	35
	850490	변압기	0~3	35
	850910	진공청소기	0	35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2	35
	852190	영상기록, 재생용 기기	0	35
	852313	마그네틱 테이프	0	80
	852731	라디오 수신기	0~4.9	35
	852812	컬러 TV	0~5	25/35
	854011	TV용 음극선관	7.5/15	60
	854121	트랜지스터	0	35

자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2005)

\* 4.7/6은 HTS 6단위 이하 세부품목의 관세가 4.7% 또는 6% 임을 의미

\*\* 4~32는 HTS 6단위 이하 세부품목 관세가 4~32% 사이에 다수 존재함을 의미